

최악의 재정난...광주 구청장들이 밝힌 현실

공약사업 ‘스톱’·공무원 체불 현실될 수도

-  **유태명 동구청장**
“시 지원만이 해결책”
-  **이기신 서구청장직대**
“새로운 일 안 벌일 것”
-  **송광운 북구청장**
“사업 내년으로 미뤄”
-  **최영호 남구청장**
“효사랑 사업 재검토”
-  **민형배 광산구청장**
“월급 못줄 상황 염두”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광주시 각 구청장들이 하반기 재정 운용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구청장들은 상급 자치단체인 광주시에 손을 내밀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음소’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도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태명 동구청장은 “재정적자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법 개정과 광주시의 도움 뿐이다”고 전제한 뒤 “사업비가 부족하면 사업을 포기하면 되지만 인건비 등 운영 필수 경비가 부족한 경우는 대안도 없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이어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자치구에 지방교부세를 직접 주도록 하는 것 ▲취득·등록세 구세 이양 및 담배소비세 직접 자치구 지급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기신 서구청 부구청장은 “인건비는 다행히 모두 확보해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신청사를 짓는데,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사관리기금 162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구청에 비해 다소 여유가 있는 서구청은 그러나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 시비를 가져오더라도 구비를 보태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새로운 일은 안 벌일 것”이라며 “채납세를 강력히 징수하고, 구유지 임야를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고 설명했다.

가장 상황이 열악한 최영호 남구청장은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최 청장은 “법적 필수경비인 인건비, 사회복지예산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3억원이 드는 효사랑 녹색화산업전을 전면 재검토하고 팔 수 있는 구유지도 시세가 6억원에 못미쳐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로부터 최대한 재정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책이라면 대책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사회복지예산이나 공무원 월급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며 “다만 불요불급한 사업, 즉 소

방도로 개설공사나 수도 정비사업 등은 내년으로 미룬 상태다”고 말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 ▲필수 사업도 축소 검토 ▲광주시·중앙정부에 예산 지원 건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근거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자치행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광주시가 담배소비세를 자치구로 넘기고 지방교부세도 더 줘야한다”며 “장기적으로 각 사업의 예산이 적정한 지를 살펴 건전성을 확보하는 자구노력도 하겠으나,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이한구 “지방 자치단체 떠도산 온다”

재정·경제통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5일 지방재정 급속 악화와 관련, 졸도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이중훈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재정악화로 도산 선언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자체도 그런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 작년 말 통계를 보니까 지난 5년간, 작년 말 기준에서 공기업 부채가 108%로 제일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부채가 76%가 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금년에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성남시보다 상황이 나쁜 데가 너무나 많다”며 “전남의 모 군 같은 경우는 거의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데 사업은 자꾸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 기자 jkpark@kwangju.co.kr



포뮬러(F1)경주장 기술안전 책임자인 찰리 화이트링 국제자동차연맹(FIA) 위원장이 15일 영암 F1 경주장을 방문, 트랙 서킷 포장과 그랜드 스탠드 등을 둘러보고 공사 진행 상황을 전해 듣고 있다. /나명수기자 mjna@kwangju.co.kr

“영암 F1 경주장 100% 만족”

찰리 화이트링 국제자동차연맹 위원장 건설현장 방문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총괄하는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영암에 짓고 있는 F1(포뮬러) 경주장에 대한 사전점검에서 ‘100% 만족한다’고 극찬해 오는 10월 열리는 코리아그랑프리가 탄력을 받게 됐다.

F1 경주장 기술안전 책임자인 찰리 화이트링(Charlie Whiting) FIA 위원장은 15일 오전 F1 코리아그랑프리 운영법인인 정영조 카보(KAVO) 대표 등과 함께 영암 F1 경주장을 방문, 경주장 건립 현황과 안전 시설, 트랙 상태 등을 점검했다.

화이트링 위원장은 경주장 메인스타디움에 도착해 시공사인 SK건설 관계자로부터 설계도를 건네 받은 뒤 관망석과 서킷이 설계대로 안전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 건설현장 곳곳을 자신의 카메라에 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검수 직후 전남도청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코리아 F1경주장을 점검한 결과 지금까지의 공사 진행과정이나 퀄리티(품질)면에서 100% 만족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전 검수는 6~7주 뒤 있을 본 검수전에 서킷 공사의 진행속도, 계획에 따른 남아있는 공사일정 등을 사전에 점검해 (본 검수 일정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가 등을 점검했다”면서 “점검결과 계획대로 공정이 진행되면 본 검수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이트링 위원장은 “코리아 서킷의 그랜드 스탠드는 다른 나라의 그랜드 스탠드보다도 드라이버의 활동상황을 눈앞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피트빌딩이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극찬했다.

화이트링 위원장은 FIA의 레이서(경주) 감독이자 기술 및 안전분야 총책임자로 활동중인 세계 모터스포츠계 거물급 인사로



F1의 최고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회 기간 중 ‘서킷의 대령관’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모든 F1대회는 출발신호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끝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오퍼셜 스타터(Official Starter)’라는 아호 직함도 가지고 있다.

한편 정영조 카보 대표는 “다음달 열릴 예정인 아시아 지역 종합 모터스포츠대회인 ‘AFOS(Asian Festival Of Speed)’는 공정상 개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대회 개최시기를 연기하는 것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

2010년 전남 지자체 재정자립·자주도

구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전국평균	52.2	75.7
전남도	11.5	30.2
목포시	25.1	52.2
여수시	28.9	58.8
순천시	20.8	64.0
나주시	15.4	62.8
광양시	37.8	66.0
담양군	14.1	56.3
곡성군	8.7	59.0
구례군	11.4	61.6
고흥군	8.6	56.7
보성군	8.9	56.8
화순군	23.1	61.0
장흥군	9.2	53.7
강진군	9.2	56.5
해남군	11.9	60.8
영암군	18.2	62.4
무안군	10.7	53.1
함평군	10.3	56.7
영광군	13.1	57.1
장성군	10.7	56.1
완도군	9.5	59.2
진도군	11.1	56.7
신안군	12.7	48.0

전남도 자치단체 재정현황 9곳,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총당 못해

경기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 상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를 비롯한 22개 시·군의 ‘재정 공간’은 어떤 상황일까. 각종 지표와 통계로 본 전남지역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는 남의 일 이야기하듯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최하위권=전남도내 지자체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11.5%다. 전국 평균 52.2%에 턱없이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다.

22개 시·군 중 30%를 넘는 지자체가 광양(37.8%)뿐이다. 곡성(8.7%), 고흥(8.6%), 보성(8.9%), 장흥(9.2%), 강진(9.2%), 완도(9.5%) 등은 10%도 못돼 재정의 90% 이상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국비 지원액 등이 늘어날 경우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재정자립도보다 국비 지원액 등을

감안해 산출하는 재정자주도가 지자체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가용재원의 비율을 말하는 재정자주도(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지자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비중)도 비슷하다. 75.5%인 전국 평균을 넘는 자치단체가 도내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참담한 형편이다.

◇월급도 못줘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도 많다. 곡성·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함평·장성·완도 등 9곳은 지방세외 세외수입까지 더해 월급을 줄 형편이 안된다. 전남 지역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많다. 재정 위기에 있어 전남도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쏟 돈을 없는데 빛만 늘어=사정이 이런 데도 지자체들의 빚은 늘어난 가고 있다. 전남도내 자치단체의 지방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22262억원으로 지난 2008년(7242억)에 견줘 5020억(69.3%)가 늘었다.

22개 시·군 가운데 채무가 줄어든 곳은 담양(202억→184억), 보성(8억→4억), 강진(170억→142억), 무안(610억→562억), 장성(225억→201억), 완도(46억→21억)가 전부다. 구례의 지방채는 ‘0’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부채가 쌓여만가고 있다. 전남도 분청도 4519억원으로 2008년(1508억)에 비해 무려 3011억 늘어나는 등 심각한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지 기자 dok2000@kwangju.co.kr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전세계 32개국 40개 주요 도시에서 독자적인 해외 취재팀을 통해 뉴스에 민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뉴스의 경쟁력입니다.

2010년 7월 16일 금요일

주최: 연합뉴스총회

주최자: 김기현 회장

주최처: 광주광역시 동구 오성동 209-15호 401호

문의: 02-2654-2111

www.allnews.com

www.allnews.com